

대만·파페치 ‘로켓성장’… 쿠팡Inc, 분기매출 역대최대 경신

1분기 매출 11.4조 전년비 21%↑
환율효과 반영… 영업이익 340%↑

파페치·대만·쿠팡이츠 등 호실적
성장사업 매출 1.5조… 78% 증가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가 올해 1분기 약 11조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또다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만 등 해외 시장 확대와 명품 플랫폼 파페치 등 성장 사업 부문이 주요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한국시간) 쿠팡 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올 1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9조4505억원) 대비 21.55% 성장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1% 증가한 수치로, 또다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쿠팡 Inc의 매출은 11조1139억원이었다. 이번 매출 증가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도 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쿠팡

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은 원화 기준 2337억원(1억 54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0% 급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역시 2%로 전년보다 수익성이 개선됐으나, 전 분기(4353억원)와 비교하면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656억원(1억14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당기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으나 순이익 규모는 지난해 4분기(1827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 쿠팡 Inc의 상거래 부문 매

출은 원화 기준 9조9797억원(68억700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을 나타내는 활성고객당매출은 42만7080원(294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했다.

파페치·대만·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 부문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해당 부문 매출은 원화 기준 1조5078억원(10억38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상각 전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조정에비타(EBITDA) 손실은 2440억원(1억 68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247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소폭 줄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컨퍼런스를 통해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큰 성장과 수익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대만에서 상품군의 폭을 넓히면서 코카콜라·펍시·P&G·유니참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 뿐 아니라 대만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현지 브랜드를 포함한 공급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쿠팡이 인수한 명품 플랫폼 파페치에 대해서도 “다음 단계로 확장을 위해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디서나 고객에게 세계 최고 럭셔리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향후 방향성을 전했다.

한편, 쿠팡 Inc는 최대 1조4000억 원(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번 매입은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되는 클래스 A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안건은 이사회 승인을 마쳤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세종 반곡동에 자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본원

/뉴시스

초고령사회 빈곤완화 정책 대응방안 모색

KDI-한국은행, 15일 심포지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5일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국은행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령층의 빈곤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은 세종 반곡동에 위치한 KDI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책연구기관 KDI의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 완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반곡동 KDI 본원서 개최
이승희·한요셉 연구위원 참여
노인빈곤 현황·전망과 대응 등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 진행

행사는 ▲세션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션2 ‘고령화 대응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이승희 KDI 연구위원이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소장이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좌장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과 김미루 KDI 국제연구팀장이 참여한다.

세션2에서는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새로운 고령 인구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소개한다. 또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과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패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동철 KDI 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심포지엄 전 과정은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법사위, 민주당 주도 개정안 처리
법안 발효,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시
공직선거법 등 5개 재판 미룰수 있어
국민의힘 “범죄자 도피처”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

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건전성·소비자보호 분리, 효율 떨어져 ‘탁상행정’”

금융위 중심 개편 시나리오 확산
조직 정체성·독립성 우려 목소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기능 축소나 위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편 시나리오가 확산되며 금감원이 금융위와 통합되거나 기능이 분할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직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식안은 없지만, 정책·감독 재편이 금감원의 기능 축소와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경계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이에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는 실무상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는 의견이 나온다”며 “오히려 감

독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무원 전환 가능성도 민감한 이슈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금융위와의 통합 시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내부 반발이 크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공무원이 되면 급여, 인사 체계가 크게 바뀌고 조직 유연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젊은 직원들이 금감원 문화나 급여 부분에 만족하지 못해 많이 떠난

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되면 우수한 인력이 더 빠져나갈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당국’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기능과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은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책기관이 감독기관 위라고 여겨지는 구조가 실제로 조직 개편을 통해 이뤄지면 지금의 균형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금감원의 위상 문제를 넘어, 통합 시 위계질서 혼선으로 조직 내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